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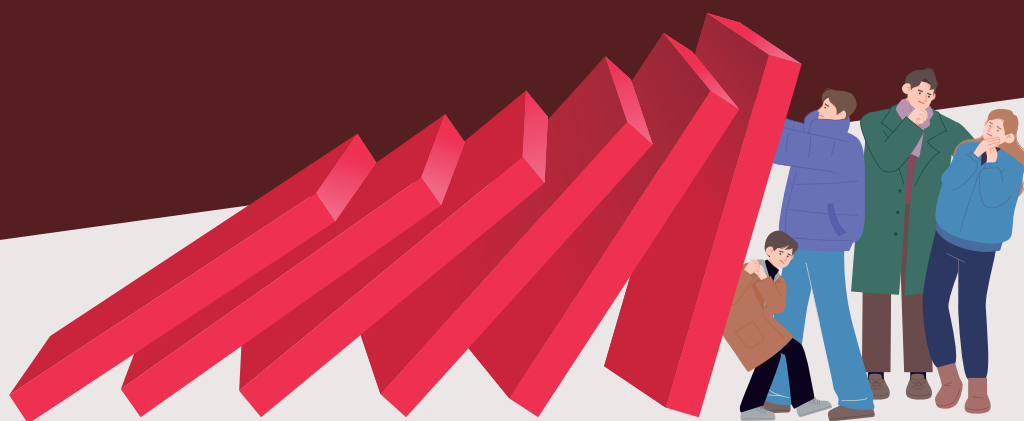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2023. 5. 3(수) 오후 2:00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민석·김병기·김병주·이재정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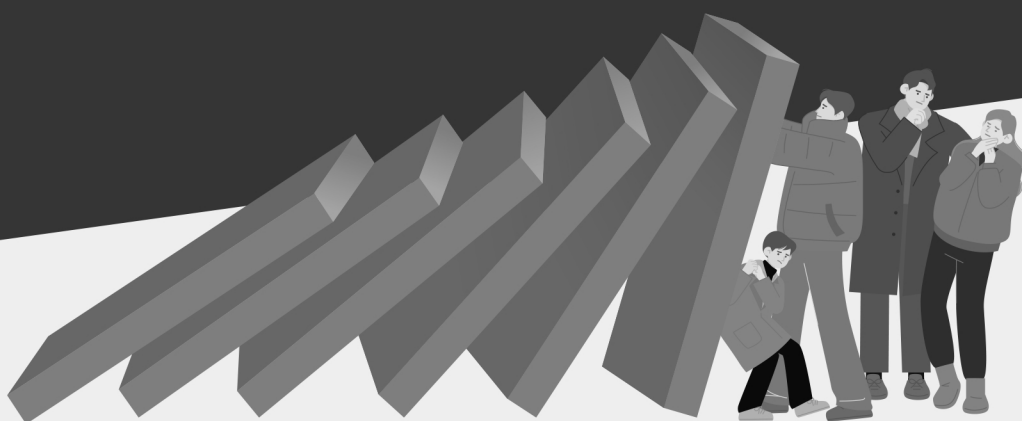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2023. 5. 3(수) 오후 2:00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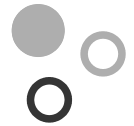


정책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민석·김병기·김병주·이재정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소개 》

■ 목적

- 윤석열정부 출범 1년간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파탄 상황 평가
- 경제·사회·정치·외교안보를 총망라한 실정 지적 및 대안 제시

■ 개요

- 일시 : 4월 2주차 ~ 5월 2주차, 총 5주간 매주 1회 진행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분야	일정
(1차) 경제	4월 13일(목) 10:30
(2차) 사회	4월 20일(목) 14:00
(3차) 정치	4월 27일(목) 10:30
(4차) 외교안보	5월 3일(수) 14:00
(5차) 특별토론	5월 9일(화) 14:00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분야	일정	주요내용
1차 (경제) “무너진 삶, 깜깜한 미래”	4월 13일(목)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우원식 국회의원(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발제1: 주병기 교수(서울대학교)◦ 발제2: 위평량 소장(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토론1: 김한정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토론2: 오기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토론3: 홍성국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4월 20일(목)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김상희 국회의원(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제1: 김윤 교수(서울대학교/보건의료)◦ 발제2: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노동)◦ 발제3: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교육)◦ 토론1: 강훈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토론2: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토론3: 김영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4월 27일(목)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박범계 국회의원(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제1: 유종성 교수(가천대학교)◦ 발제2: 지병근 교수(조선대학교)◦ 토론1: 장경태 국회의원(최고위원)◦ 토론2: 최강욱 국회의원(前 최고위원)◦ 토론3: 박성준 국회의원(대변인)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5월 3일(수)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김민석 국회의원(정책위의장)◦ 발 제: 최종건 교수(연세대학교)◦ 토론1: 김병주 국회의원(국방위원회)◦ 토론2: 이재정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토론3: 김병기 국회의원(정보위원회)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5월 9일(화)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 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발 제: 시민발언자들(안전, 언론·노조탄압, 주69시간 논란, 고물가 등 관련)◦ 토론1: 고민정 국회의원◦ 토론2: 김한규 국회의원◦ 토론3: 이탄희 국회의원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제4차 외교안보 :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 목적

- 윤석열정부 출범 1년간의 외교안보 실정 지적 및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일 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 주 관 : 국회의원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이재정

■ 진행 순서

시 간	순서	패널 및 주요내용
14:00 ~ 14:05		사회: 이용민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축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14:05 ~ 14:10		사진촬영 / 장내정리
14:10 ~ 14:40		[좌 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제 (30분)	국익외교의 실종과 불안한 한반도 평화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평화군비통제비서관)
14:40 ~ 15:00	패널토론 (각 7분)	김병주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병기 국회의원 (정보위원회)
15:00 ~ 15:10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Contents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4차 외교안보 :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발 제

국익외교의 실종과 불안한 한반도 평화

- 최종건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토 론

- 김병주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27
-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31
- 김병기 국회의원 (정보위원회) 35



발제

국익외교의 실종과 불안한 한반도 평화

최종건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前 문재인정부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평화군비통제비서관



국익외교의 실종과 불안한 한반도 평화

1. 서론

-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윤석열정부 출현 이후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정책 추진으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는 멈춤
 - 그 대신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으로 자리매김
-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한해이기도 하지만 한미동맹 70주년
 - 6.25 전쟁의 정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지난 5년의 노력이 부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만 강조되는 상황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외교행사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식은 사라지고,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확장억제의 “확장판”으로 워싱턴 선언이 4.27일에 등장
 -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듯 5년전 그 날,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합의,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본격 가동
- 정전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2023년 워싱턴 선언과 2017년 판문점 선언의 극명한 명함이 매우 뚜렷한 상황
 - 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 안보, 미국 및 중국 동향, 북한현황, 경제안보, 주요국의 실용외교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후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을 평가하고 민주당에 정책 조언

2. 주요 국제현황

□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 (전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 어느 쪽도 결정적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쟁의 장기화 국면 지속
 - 미 국방정보국 (DIA) 작성 공개된 기밀문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상당 부분 탈환하고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해도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효과적인 작전을 위한 병력과 공급 부족으로 양측이 획득할 수 있는 영토는 일부에 불과할 것임 / 소모전이 24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
 -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결정적 타격을 가해 더 많은 영토를 장악 후,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시도 가능성 상존하며, 우크라이나는 많은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과감한 공격 감행 가능
 - 5월 봄, 양측은 동부전선 주요 도시 점령과 탈환을 목표로 본격적인 전투를 감행할 것으로 예측됨
- (무기지원 동향) 대부분 나토 회원국들은 무기지원 중 국제사회는 한국의 향후 지원에 관심 증가
 - 23년 2월 현재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는 28개국으로 총 684억 9000만 달러
 - 나토 회원국들은 적극적 군사지원에 나서고 있음. 미국은 4월 현재까지 354억달러 (약 46조 8000억원) 어치의 무기 및 보급품 지원하였으며 독일은 ‘시대전환 선언’ 후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등 35억 7000만 달러, 영국은 첼린저 전차등 66억 3000만달러, 폴란드 23억 6000만 달러 (T-72 전차 230대 등), 네델란드 23억 6000만 달러 등 지원
 - 올해 G7 의장국 일본 기시다 총리는 3.21일 키이우 현지에서 “22년 이후 총액 71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재정지원을 결정했다”며 “전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발표. 현재까지 방탄조끼, 방탄헬멧, 천막 등 비살상 물품 지원 /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사할린을 통해 액화천연가스를 계속 수입 중

○ (대러규탄 이탈 상황)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독자적 움직임과 연대 강화되는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이루어진 6차례 대러결의 표결 변화 주목 필요

- 22.03.02 러시아 침공 비난 및 철군 요구 결의안에 141개국 찬성하였으나, 고르비아, 터키, 카타르, 중국, 인도, 남아공, 세네갈 등 35개국 기권 => 세계 인구의 33.1%가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최소한 중립
- 22.11.04 러시아에 대한 구제 배상요구 결의안에 99개국 찬성, 73개국이 기권
- 23.03.29-30 2차 미국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130개국 참여, 공동성명에 찬성한 국가는 73개국에 그침 (한국, 일본, 호주, EU국가 등만 찬성)
-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은 러시아산 값싼 원유 지속 수입하며 자국 화폐로 교역 중 / 2.24일 남아공, 중러와 함께 인도양에서 연합군사훈련 진행

○ (러시아) 3월 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계획”발표

- 벨라루스에 전술 핵탄두 배치를 위해 “저장시설의 건설을 7월 1일까지 마칠 것”이며 벨라루스에 이미 배치한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 (최대 사거리 500km)와 군용기 개조(10대)하여 투발 능력 강화 예정 /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영토 밖에 최초 핵무기 배치
-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공개적인 목표로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시설 사찰 거부하며 뉴스타트 이행 중단 선언 / 3.28일 미측은 러시아에 6개월마다 러시아에 제공해야 하는 폭격기, 미사일, 핵탄두 관련 정보 제공 중단 / 3월 29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에 따라 이행되었던 러-미간의 핵정보 이전 중단 선언. 러시아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사전 정보 공유 중단 선언.

* 뉴 스타트 (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조약) : 2011년 발효된 미러사이에 유일한 핵군축 협정으로서 양국이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수를 각 1550기 이하로 유지하고 협정 이행여부 검증을 위해 상호 사찰과 정보 제공을 하도록 규정

- (포탄 보급 관련) 전쟁이 1년을 넘어 가면서 미국의 포탄재고량 부족 상황에 직면
 - 4.12일, 미국 방문 중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여 한국의 풍부한 포탄 재고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폴란드는 124억달러(약 17조6000억 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 계약 (다연장 로켓포 ‘천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등 포함).
 - 미 도청 문건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대화하는 내용 포함 / 김 전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무기지원 요구에 응할 경우 ‘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 155mm 포탄 33만발을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판매 가능성 언급.
 - 윤 대통령,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4.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보도
 - 러시아는 즉시 반발.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확실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분쟁에 개입하는 걸 의미한다”고 경고 / 푸틴 대통령의 강경파 측근 메드베데프 연방안전보장 부의장은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과하는 이가 새로 등장했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뒤“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텔레그램에 게시
 - 4.28일 오후, 주한우크라 대사는 러시아의 포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주거 건물 사진과 함께 “러시아 전범들이 20발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평화롭게 잠든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하였다며 “이건이 바로 한국의 지도자가 언급했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요?” 라며 트위터 메시지 발송

□ 경제안보 관련

○ (미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북 압박 기조 심화 전망

- 북미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보다 제재 유지, 확장억제 등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대북 접근법 유지 예상 / 대중 압박에도 유리
- 미·중 갈등은 가치(인권)와 체제(민주 對 비민주)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것 / 첨단기술 및 제조 분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에서 중국의 공급망 배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 글로벌 공급망의 진영 간 블록화 형성 도모
- 특히, 민주-공화 양당은 22년 중간선거 성과를 바탕으로 24년 대선을 향한 대중 견제 및 대북 압박 유지 /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공화당의 견제 기조에 따라 미국 이익 중심 외교기조 유지
- 첨단기술·제조 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 추구
- 2022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과학법(CHIPS)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산업 보조금 투입을 통해 신보호무역정책 추진 중
- IRA: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 중 4,330억 달러를 정부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형태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거 투입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 최종 조립, ▲미국 또는 미국 자유무역협정 발효국에서 생산 또는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핵심광물 사용,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소재 사용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필요 ⇒ 국산부품 사용의무(LCR)는 2023년부터 시행, 매년 적용 비율 증가 예정 / 핵심광물은 2027년 이후 80%, 배터리 소재는 2029년 이후 100%의 사용 비율 충족

- CHIPS: 총 2,80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핵심 미래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책정 / 527억 달러가 반도체 제조시설 건립 및 첨단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등에 투입 예정
 -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 기업은 ‘안보위협국’에서 생산시설 확장, 신축 금지하는 강제조항 설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 목적 / ‘우려국가’의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소재가 일부라도 사용된 전기차량은 세액 공제 대상 배제
 - 4.4일 미국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박을 우회 수출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생산업체 6곳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 태국 업체 3곳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결정.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압박하는 미국이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한 뒤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가려는 우리 산업계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
-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3.31일, 일본 정부가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 등 23개 첨단 제품을 수출 규제대상으로 추가 발표
 - 일본은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35%로 미국 (40%)에 이은 2위 국가로서 이번 조치로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23개 품목 수출관리 강화
 -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미국-일본-네델란드 반도체 장비기업들의 중국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16%, 44% 감소하여 중국 메모리 반도체 투톱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의 신규 첨단공장 건설 중단 ⇒ 삼성전자 (낸드의 40% 생산)와 SK하이닉스 (D램 20% 생산) 영향 주목 필요.

- (중국 대응) 중국은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자신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일본이 제기한 조치는 개별국가의 협박 아래서 중국에 해를 가한 행위이므로 시정하라”고 촉구
- 3.31 중국 정부는 미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 실시 발표.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 등 대중규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며 한국과 일본 등에 보내는 신호라고 업계는 해석
- 작년 12월. 중국 정부, 네오디뮴 자석, 사마륨 코발트 자석(전기차,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류등에 사용)의 제조 기술을 수출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수출 규제 수출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발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
 - ⇒ 미국이 사용했던 국가안보의 명분을 앞세워 희토류를 수출 금지를 고려중인 것으로 판단됨. *희토류 일종인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중국 84%, 일본 15%,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이상, 일본이 10%이하로 사실상 중국이 자석 공급망을 장악중
 - ⇒ 최근 FT는 미측이 우리측에 중국의 잉여 반도체 수출 요구 거부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바 향후 처리 주목 필요

□ 한중관계 동향

○ (현황) 2018년 한국 최대의 무역 흑자 상대국 중국이 2023년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변화. 특히, 중국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 하락이 한국의 대중 수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올 해 1,2월 대중국 무역적자 누적액이 50억 7310만달러 (약 6조 6천억원)으로 집계 / 원자재와 석유를 주로 수입하는 호주 (48억 1500만불), 사우디아라비아 (46억 1500만불)를 제치고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중국으로부터 기록

○ (원인) 한국은 2018년 중국과 무역에서 556억 36000만불 (약 73조 326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가 올 해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고 1992년 이후 최초.

- 중국 경제 침체로서 22년 경제성장률이 3.0%에 그침.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수입 증가율이 1%밖에 증가하지 않음 / 중국내 배터리, 플라스틱, 고무, 기계류 등 주요 부품의 자체 생산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한중간의 무역관계가 디커플링 되고 있음/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상호 보완 관계 약화

○ (전망)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기술성장, 서비스 중심 성장, 생산자급 능력 성장등으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중국산 이차전지 원료와 배터리 중간재 등의 수입 증가 추세 (2차전지가 포함된 정밀 화학원료 (18억 5000만불 적자), 건전지-축전지 (13억 7800만불 적자), 적자규모 1,2위)
- 중국의 무역구조 재편으로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등에 악영향. 올 해 1,2월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을 -12%, 대만 19.2%, 일본 -8.2%였으나 미국은 12.2%, 독일 7.4% 증가하였음.
- 한편, 4.13일 시주석은 광둥성 광저우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사업장 전격 방문하여 ‘한중관계에 대한 덕담’을 함 / 재계는 시주석의 깜짝 방문에 대해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전제하는데 있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

□ 중국외교 동향

- (위안화 국제화 상승 동향) 3.27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중국 정유회사 룡성 석유화학의 지분 10% 매입
 - 아람코의 역대 최대 규모 해외 지분 인수를 위안화 246억위안(4조7000억원)으로 집행
 - 중동이 거액의 위안화 투자와 결제를 늘려갈수록 페트로 위안 (석유 위안)의 실현가능성 상승. 시진핑은 작년 12월 리야드에 개최 중국-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의 위안화 결제 추진” 언급. 3.14일 중국은 사우디 국영은행에 최초 위안화 대출 실시. 3.28일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아랍에미리트산 액화천연가는 6만5천톤 수입대금을 위안화로 결제 (LNG는 통상 달러로 결제하는데 최초 위안화 결제)
 - 러시아에서 달러를 제치고 위안화가 최초로 최대 사용 외화 (1%→16%). 3.21일, 중-러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와 결제에서 위안화 사용 지원” 공약
 - 3.29일 중국과 브라질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와 헤알화로 무역 결제 합의.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무역국으로 양국 교역액은 1505억달러. 이를 통해 중국은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 손잡고 달러를 우회하는 대규모 무역금융 거래 가능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원인은 미국의 제재 정책에 기인. 미국이 중국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를 가하면 중국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상존

- (시진핑 정상외교)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인 ‘안방외교’ 실시 중
- 22년 11월 G20과 APEC에 참석한 시주석은 19개국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
 - 3월 중순 양회 (전국인민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나자마자 20~22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중-러 관계 강화
 - 3.31일 보아포럼 계기, 산체스 스페인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봉고온디바 가봉 대통령, 브라징 룰라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 진행
- ⇒ 시주석은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 강조 및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 반대, 개발도상국 공동이익 수호 등에 중점을 두고 회담 진행. 특히, 3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를 중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재자를 자처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후 미국의 “독재 대 민주주의”라는 서사에 대해 마치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차분히 보여주고 있는 형국

□ 주요국가의 독자 및 실리 외교 동향

○ (인도) 올해 G20 의장국 인도는 1월 12~13일 ‘글로벌사우스의 목소리 정상회의’ 개최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과잉채무, 식량에너지, 빈곤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구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 (사우디) 4.2일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석유수출기구(OPEC)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 참여하는 OPEC+ 하루 116만 배럴 원유 추가감산 결정

- 사우디가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가운데 감산 결정 주도. 사우디는 5월부터 원유 생산을 50만 배럴, UAE 14만4천배럴, 이라크와 알제리, 카자흐스탄도 각각 하루 4만8천~21만천 배럴 감산 결정

⇒ 텍사스산 원유가 6% 상승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타격

- 사우디는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 대상국가들과 적극 관계 회복하면서 탈미국 행보 중이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해협력기구에 대화 파트너로 참여 결정. 사우디가 자국을 둘러싼 안보상황에 불확실성 (21.8월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철군, 미-이란 관계 악화, 미중긴장, 탈탄소 등)을 느끼며 새로운 외교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민주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가치외교가 절대왕정 국가인 사우디의 실권자인 빌 살만 왕세자를 불편하게 했다는 관측
- 미국은 사우디가 전략적 동반자라며 담담한 반응이나 중동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결과로 다수 해석

- (브라질) 룐라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 강화를 추진하며 독자외교 강화
 - 위안화-헤알화의 무역 (1505억 달러/약 195조원)의 금융 결제 비중을 높이고 농업, 교육, 보건, 금융, IT등 20개 이상의 양자협정에 서명, ‘중-브라질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4.12-16일 간 방중 일정 중 위안화 국제화를 옹호하며 미국의 대중기술 봉쇄를 반대하는 행보 시현 / 브릭스 국가들이 2015년 서방주도 금융체제에 대항해 설립한 상해신개발은행 본부를 찾아 “첫 대통령 임기에 ‘나는 매일 밤 모든 나라들은 달러를 거래해야 하는가. 누가 달러를 국제 결제 통화로 정했는가’ 자문했다”고 발언
 - 브라질은 중국과 G20, 브릭스 등 다자 틀 내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금융, 기후변화 대응, 환경 보호에 대한 조율과 협력 강화 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미중 긴장관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모습 시현
 - 마크롱 대통령은 시주석을 두차례 만난 뒤 “동맹은 속국과 다르다”, “유럽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추종해선 안된다”며 유럽의 전략적 독자성 강조
 - 4.6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중하여 시주석과 3자회담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은 19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고 폰테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9년 12월 취임 이후 첫 방문) => 유럽측은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 견제가 목적이거나 양측은 경제적 관계 강화 강조

- (G7 외교장관) G7 외교장관들은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회담한 뒤 18일 중국을 겨냥해 “힘과 위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영국 클레벌리 장관은 같은 날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중국을 다루는 데 위협이나 기회나 둘 중 하나를 이분법적으로 선택해서는 안되며 좀 더 미묘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중 강경파를 경계.
- 영국 클레벌리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영향력이 있다”며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잃을 것인데, 나는 내가 가진 영향력을 버릴 뜻이 없다”고 하며 영국의 본심이 드러난 것으로 관측
 - 특히, 그는 중국과 “관계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는 요구를 대중 강경파로부터 받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양자 관계를 경쟁자냐, 위협이나, 도전자냐, 기회냐 라는 한마디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단순화라고 일축
 - 클리벌리 장관은 “중국은 크고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 기술력도 가졌다. 환경·경제 분야에서 믿을 수 없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며 “따라서 중국과 밀접하게 규칙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발언
 - 중국과 관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동의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만 해협이 국내 문제’라는 중국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무력이 아닌 상호 동의로 해결하는 게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

□ 북한 동향

- (군사동향) 3월 13일~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 북한의 무력시위가 다양해지고 대응 수위도 전례 없이 높아졌으며 전술핵탄두 실물과 사진 공개
 - 22년 말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당시 북은 단-중-장거리 등 여러 종류 미사일 발사에 치중 / 동서해 포격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규모 공군훈련, 전술행 운용부대 훈련,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미사일 발사
 - 올 봄에는 여러 종류의 비대칭 전략을 동원하여 군사력을 과시함 : (3.12)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3.16) 대륙간탄도미사일, (3.18) 전술탄도미사일 KN-23, (3.22) 순항미사일, (3.21-23) 핵무인 수중고경정 실험
 - 대남, 대미 시그널은 명확: 한미의 탐지, 타격, 요격을 피해 미사일 발사 수단이 이미 다양화 (미사일 발사대, 열차, 잠수함, 골프장 내 호수, 야산 지하격납고 등) 되었음을 시현
 - 한미의 선제 공격시 북도 2차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북의 반격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 시그널의 핵심
 - 3.28일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 소식을 보도하면서 최초로 전술핵탄두 실물 “화산 31”과 사진 공개하며 8종의 투발 수단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전술지대지 미사일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신형전술 유도 무기, 화살 1,2 순항미사일, 핵어뢰 해일 등) 장착 가능 설명
 - 4.13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ICBM발사 / 고체연료 ICBM은 핵 소형화와 함께 북한 핵무력완성의 ‘최종관문’으로 평가됨

- (식량상황) 2월 18일 윤정부 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했다”고 발표
 - 김정은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식량증산을 꾸준히 추구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영농기계화, 운반능력, 도정 및 보관시설 개선 중
 - 세계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의 식량생산이 2000년도 대비 2022년에 40% 증가하였다고 추정하며 농촌진흥청은 같은 기간 25% 증가 추정
 - 22년 농촌발전 10개년 계획 수립하여 23년 12가지 고지 가운데 알곡, 질소비료, 수산물 등 먹거리 문제 해결에 집중. 2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재정 지출 계획에서 농촌발전 분야를 전년대비 14.7% 증액
 - 개인텃밭과 경사지의 식량생산량을 고려할 경우 북한의 식량난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무리 / 북한은 먹거리 다양화 추진 중. 곡물생산량 위주로 식량사정을 평가하는 것은 업데이트 할 필요
 - 단, 코로나 19가 대유행 하면서 취약계층 사이에서 일부 아사자 발생 가능. 확진자 확산에 따른 영농활동, 지역별 이동성, 중장정부의 시장 개입 및 통제가 저하되면서 식량 생산과 유통에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 다대
 - 한반도의 북쪽 지역은 재해성 이상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아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 21년 7월 북한은 유엔에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VNR) 제출. 북은 2016~2020년 식량 생산량을 농촌진흥청과 세계식량기구 추정치보다 연평균 약 100만톤 더 많은 것으로 보고

- (국경동향) 20년 1월 코로나19 발병이후 약 40여개월 단혀 있었던 조-중 국경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2019년 북중 교역액은 27억 8900만 달러였는데 이중 70%의 교역이 단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21년 9월부터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통해 긴급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육로 교역은 여전히 중단된 상황 / 단둥 현지에선 5월 20일을 목표로 북중이 단중-신의주간 육로 재개방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북중 무역업자들이 다시 단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
- (북중관계) 김 위원장-시 주석간 친서 교환 및 공개를 통해 양국 협력관계 대외 시현
 - 3.10일 김 위원장,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직후, 시진핑 주석에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는 내용의 친서 송부 / 4.7일 시주석은 양아전 주북한 중국대사를 통해 구두 친서 전달
 - 시 주석은 21.7월에는 “100년 만에 처음보는 세계적인 대변화”, 22. 11월에는 ”전례없는 방식의 세계시대 역사의 대변화”라는 표현을 쓰며 미중관계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김 위원장에 전달
 - 4.18일 시진핑 주석, 답전을 통해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웃)”이라며 “중-조 친선은 오랜기간 국제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발전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금 국제 및 지역 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북-중 협력 필요성 강조
 - 특히 시 주석은 “김정은 총비서 동지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조 관계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인도해 지역과 세계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인도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양국간 친밀감 과시

□ 동북아 군사적 긴장 증가

○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동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4.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방미 중 케빈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회담에 대해 경고를 위해 중국은 8~10일 항공모함 ‘산둥’을 동원하며 대만섬을 포위하는 위협훈련 감행
- 미 7함대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17일 구축함 밀리어스함을 투입, 대만해협을 지나는 항행의 자유 작전 진행 / 중국 동부전구는 “국가의 주권과 안정 및 지역의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경고 성명 발표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 본격 진행 중이나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벌이고 중국은 서태평양까지 항공모함을 내보내 훈련
- 4.13일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신형ICBM 화성 18 발사 직후, 미국은 14일 한반도에 전략폭격기 B-52H를 띄어가며 북한 압박 / 한미일은 워싱턴에서 안보회의(DTT)개최,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 훈련 정례화 합의
- 퓨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톡에 주둔중인 극동 태평양 함대의 불시점검 훈련 진행 (2만500명의 병력, 167척 전함 및 보급함, 12척의 잠수함, 89기의 항공기 및 헬리콥터 참여) / 18일, 함대와 해안미사일 부대가 동시에 동해 타격 훈련 병행
- 같은 날, 한미일은 이지스 구축함을 각각 1척씩 동원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미사일 방어 훈련 진행

3. 윤석열정부의 첫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

□ 혼란스러운 외교안보대북정책

○ (전략 혼재)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메시지는 전무하며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를 흑자로 되돌릴 수 있는 경제외교 방책 실종된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와 자유를 강조하며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3국 협력만 강조하는 단선 외교에 몰입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억제와 한반도 평화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임에도 윤 정부 들어 한-중, 한-러 관계는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미중리의 갈등과 주요 비동맹 국가들의 이탈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작동 불능
- 남과 북의 날선 무력시위가 일상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안보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미국과 중국의 선택적 진영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북한은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랑곳 없이 핵탐제가 가능한 전략 전술 탄도 미사일을 10여 차례 발사 ⇒ 한국형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의 신뢰도 하락 위험 증가
- 윤정부가 자유연대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중 경쟁시대에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해 주요국의 균형외교 노력과 대비 되고 있는 상황 / 우리 외교의 국익외교가 무언인지 의구심이 국내 여론에 팽배
- 미국 조차 IRA와 ScienceChip법안을 통해 미국식 보호무역 산업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

○ (비핵화) 4.14일 윤 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으로 대체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의 원인이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에 있다고 명시

- ‘2023 통일백서’에서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부터 2018년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용어 사용중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사용

○ (동맹과신) 현 정부는 동맹 의존이나 동맹 과신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 도청문건 공개 당시, 국민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깊은 논의가 오가는 대통령 실등이 도청되었는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도청되고 있는지 등을 걱정하며 응분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
- 정부는 국민방문을 의식한 듯 “사과 요구 않겠다”, “상당수 위조”, “미국 당국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해했다” 식의 상식과는 다른 대응
- 한미 동맹의 본질적 가치, 상호신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호히 하는 모습 실종

○ (대통령 리스크) 윤 대통령의 언행 관련 과도한 대외공약 메시지를 내부 공론화 과정 없이 해외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방식

- 한일정상회담 하루 전인 3.15일 <요미우리>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제3자 변제안에 관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은 만한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카드를 꺼내 보임. 외교부가 그간 유지했던 “일본 쪽의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며 그래야 발표 할 수 있다”는 방식을 뒤집는 결과 초래
- 4.1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암시 / 대만해협의 긴장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고 발언
=> 한-중, 한-러 관계 악화일로
- 대통령이 일방주의적 방식으로 기존 정부가 유지해왔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후 외교안보부처가 이를 따라하는 방식의 패턴 등장

- (한미정상회담 평가) 최근 한미정상회담은 국빈방문의 성격을 띄면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외견상 긍정적인 모양이 연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여러 문제점 노정
 - 확장억제 강화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도출은 매우 소홀하게 접근함.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하는 한미의 공동된 노력으로 일견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상 미국이 기존에 유지해왔던 한반도 핵무산 정책을 공약한 것으로 평가됨
 - NCG (Nuclear Consultation Group)를 발족하였지만 그 격이 기존의 2+2 차관급 EDSCG와 달리 차관보급으로 낮아졌으며 미국은 핵공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
 - 오히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비핵화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자체 핵무장 욕망을 잠재우며 한국의 NPT 준수를 촉구하는데 총력. 이는 그간 한미간 이견과 균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평화, 경제, 자존감을 상실한 외교 정책

○ (Peace-Making)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 한반도의 외교안보는 “안으로는 외교안보역량을 키우고, 밖으로는 위협을 줄이는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함 / 한미동맹 편중 (확장억제강화) 외교안보로 인해 대북관여 정책 중단, 한미일 협력 강화, 한중관계 불투명, 동남아 지역의 우리 독자 외교 실종 (인태전략으로 귀속)
- 담대한 구상은 구상으로만 남아, 이행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 북한의 도발 (미사일 및 유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미숙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논란 및 독자핵무장과 같은 비이성적인 담론 등장 /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전정부의 노력 폄하 및 주요인물들 귀속 및 기소

○ (Money-Making) 경제이익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 미국 IRA 법안 대응 미숙으로 인한 우리의 미래먹거리 산업 불안감 /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숙으로 인한 민생 불안감 증가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불안감 증폭
- UAE의 300억불 수주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 추진은 대통령의 “적” 발언으로 현지 경제인들의 의구심 높아짐
- 경제안보에 대한 총체적 비전 부재 / 공급망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 시킬 수 있는 입체적인 지역 외교 필요

○ (Pride-Keeping) 국민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 정상외교의 불안감 팽배 / 대통령의 언행으로 인한 국가품위 손상 (해외언론 평가 악화 ‘기본이 안된 대통령’)
-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강제징용공 문제 졸속 처리 / 대일외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구심 팽배 /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한 좌절감 팽배
- 국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 팽배 / 언론자유도 하락

- (2023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발전의 결정적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 /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
 - 2023년 미중관계 경색 강화 및 동북아 안보 불안 지속 유지 / 미측의 신보호무역 강화속에 한미일 협력 강화 / 북한의 대응 또한 매울 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 불안 요소 증대
 - 윤 정부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속에서 대북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중국관계 관리에 어려움 봉착
 - 미 IRA 등 新 보호무역 정책 시행에 따라 우리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등 첨단 산업계의 관건적 한해가 될 것 / 국내산업 영향 주목

4. 결론

○ (평화)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꼼꼼한 메시지 발신 필요

-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재발 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차원의 캠페인 필요 / 6.25 참전 국가들과 당차원의 정전 행사 진행 등.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시 북한의 행위를 따박따박 규탄하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우선이라는 메시지 지속 발신 / 특히 정부를 향해, 확장억제 이외에 한반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구현 요구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성을 위해 당내 스터디 그룹, 대중 및 지식인 세미나 등 개최
- 5월과 6월 꽃게철 서해 NLL과 접경지역에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당내 특위 구성 및 이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
- 한중관계 악화 관리를 위해 의원외교 강화 / 베이징 및 워싱턴 현지 방문하여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당부 / 정부에게는 한중관계 악화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속 부각하며 향후 계획 유무 질의 및 압박
-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우리의 살상무기 및 포탄 지원에 주목하며, 비살상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 지원 의사 지속 표명

○ (경제) 한미와 한중 경제 관계의 명확한 손익 계산 진행

- 한미 안보동맹 강화가 한중 경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꼼꼼한 계산 필요 / 한국 첨단 미래먹거리 산업의 국내공동화 우려 관리
- 대선국면에 들어간 미국이 바이오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신보호주의적 압박 요구 가능성에 대비
- 특히, 한중관계 관리의 중요성 급부상 중인 가운데 대통령과 외교부 등이 대만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 시킬 필요 증대
- 실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외교가 경제안보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압박 / 가치외교를 앞세울 경우 진영외교로 인식 될 뿐만 아니라, 왕정국가인 대부분의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적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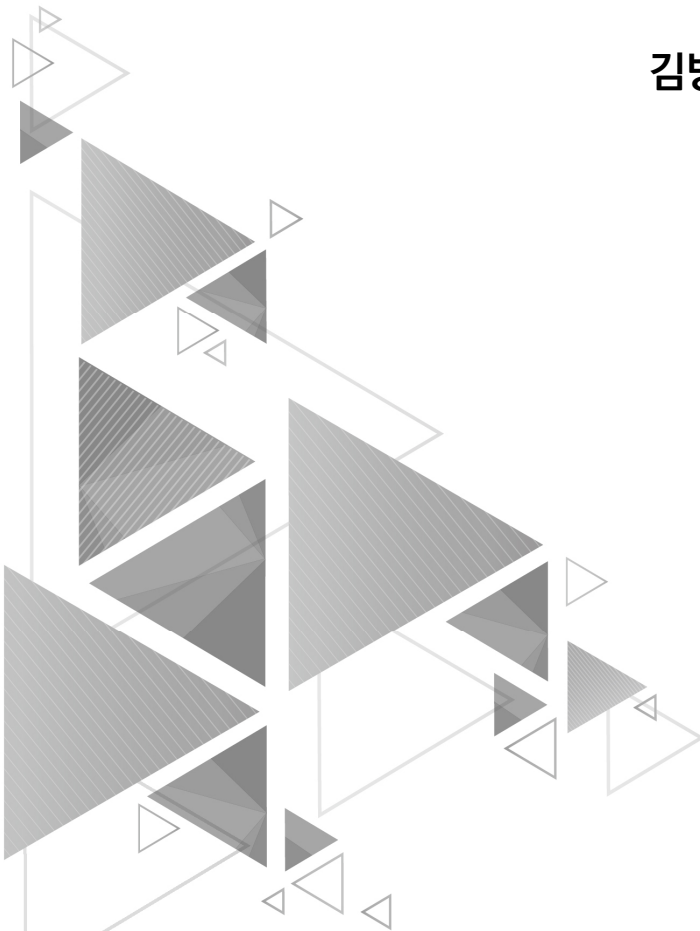
○ (자존감) 상처받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대안 메시지 및 외교행위 시현

- 자극적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 및 조롱하는 메시지 보다, 엄중히 꾸짖으며 국민에게 호소하는 메시지 발신 필요
- 외교의 목적이 국익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고 국익에는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평화 실현과 함께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내야 한다는 안정된 메시지 발신



토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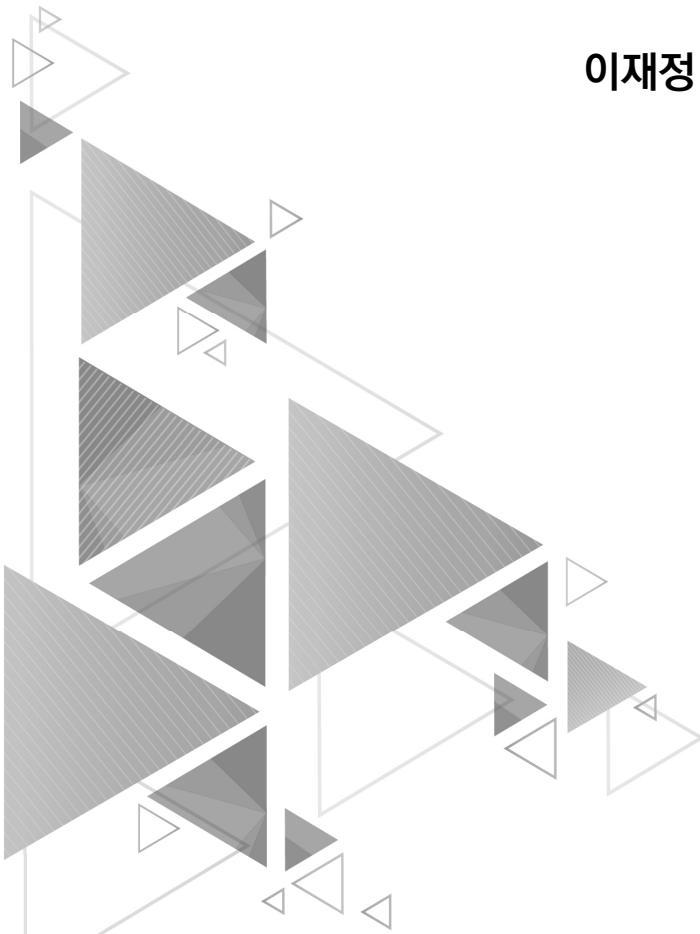
김병주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토론 2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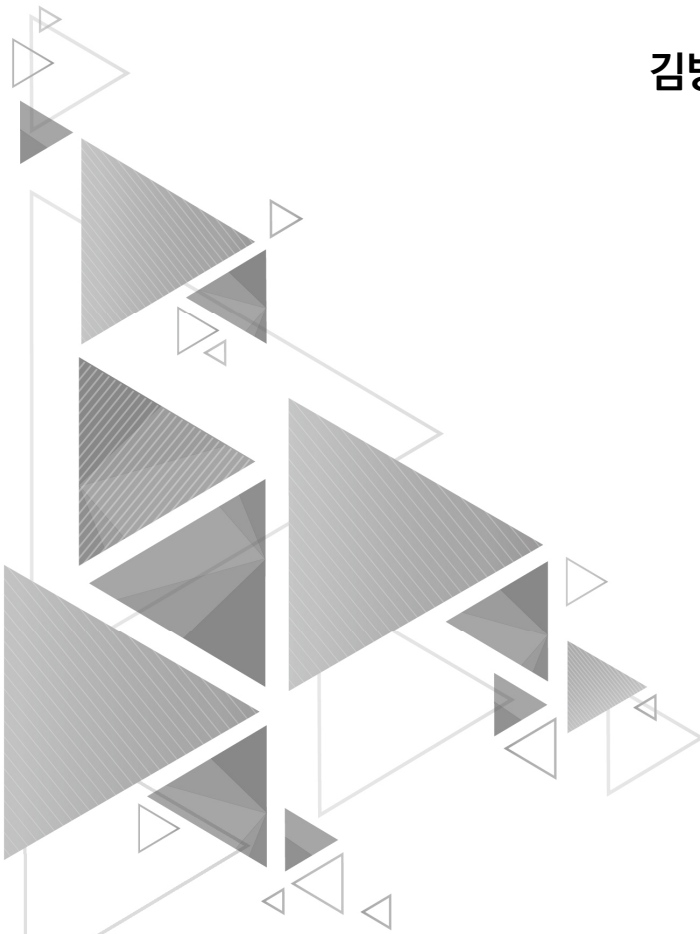


memo



토론 3

김병기 국회의원 (정보위원회)



제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